

법원, 김 지사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제명 처분 효력정지 등 받아들이지 않아

민주 도지사 경선 참여·당적 유지 불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조치가 가혹하다며 제기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8일 김 지사가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

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결정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김 지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했으며, 당일 결정을 유보한 뒤 8일

오후 늦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당적 역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정치관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 간에 당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종료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이원택 “흑색선전·정치공작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해당 정책간담회, 직접 개최하거나 요청한 자리 아냐” 식사비 대납 의혹 전면 부인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당에 신속 윤리감찰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경래 당대표의 긴급 감찰 지시와 관련해 “이번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경선은 전북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럼에도 경선을 앞두고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간담회는 내가 개최하거나 요청한 자리가 아니며, 누구에게도 식사비 결제를 요구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고,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 비용은 별도로 지불했다”며 “간담회 종료 전 자리를 떠나 이후 결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사비 주인의 언론 인터뷰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이번 의혹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경선을 하루 앞두고 보도가 이뤄진 점에서 그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해당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당에도 사실 그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당국에는 CCTV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에는 신속한 윤리 감찰을 촉구했다.

경선과 관련해서는 “거저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낡은 정치, 흑색선전에 기대는 비열한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며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이 의원은 “그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식사비는 N분의 1로 생각하고 수행원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특별자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 결제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고, 해당 도의원은 자기 지출 포렌식을 통한 철저한 캠프 내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경선에 임하겠다”며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긴급 윤리감찰 결과를 보고하며 “8일 현재까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정된 도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서 당원과 일반도민을 상대로 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오만호 기자

“이원택 대납의혹 재감찰 없인 경선 정당성 없다”

민주 안호영 의원, 경선 중단 촉구... 당 지도부 판단 반박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안호영 의원이 경쟁 후보인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술값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감찰과 경선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혐의 없음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번 결정은 졸속 감찰에 기반한 것으로 도민과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찰 과정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혹은 7일 낮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고, 같은 날 당대표의 긴급 윤리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며 “결국 감찰은 당일 저녁과 다음날 오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당사자인 이원택 의원의 비용을 결제한 김승지 도의원 그리고 참석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모임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와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이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성격을 띤 자리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해당 모임을 ‘정책



간담회’라고 표현했다가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역시 해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이 모임 동중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과 달리, 식사 이후 참석자들과 셀카 및 단체사진을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해당 모임이 후보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식사비 결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김승지 도의원이 며칠 뒤 전북도의회 법인카드를 이용해 나눠 결제한 이른바 ‘조끼기’ 결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제3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핵심은 비용 지불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라고 질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판단 방식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중앙감찰단이 ‘현재 혐의 없음’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보고했고, 최고위가 이를 근거로 경선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채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원택의 원에게는 조건부 판단을 내리면서도 비용 결제 당사자에 대해서만 추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꼬리지르기식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경선 강행에 따른 후폭풍도 경고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이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향후 수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보 선출 이후 당과 도정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분한 검증 없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도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재감찰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경선 중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민주 도당 선관위, 기초단체장

본경선 일정 11~12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선거관리위원회(회장 박영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본경선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당초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초단체장 본경선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조정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본경선 일정(4월 8~10일)과 일부 겹치면서 안정적인 선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경선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를 활용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선 일정 역시 변동 없이 유지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결선이 실시된다.

/오만호 기자

‘신 공공 시대’ 전주 대전환

임정엽-국주영은, 전략 논의

임정엽 전 전주군수와 국주영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연속 정책 간담회를 통해 ‘신 공공 시대’ 구상을 구체화하며 전주 시정 혁신과 전주-원주 상생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기존 공모사업 중심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전주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선제형 예산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시범사업 선도도시 모델을 통해 국가 예산을 선점하는 공격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비전으로 제시된 ‘신 공공 시대’는 시민이 정책을 주체가 되고, 행정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책임지며, 민간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담당하는 분업형 거버넌스 체계다.

두 인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이 정책을 기획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협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원주 상생의 대표 사업으로 항공기·선박·무기 등 첨단 산업 부품을 검사·인증하는 국가급 검사소 공동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전주의 탄소 소재 산업 기반과 원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제조 인프라를 연계해 0부가까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양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와 원주를 첨단 제조 기업중 허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만호 기자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경선 앞두고 군민에 투표 호소

오는 11일과 12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득수 예비후보가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8일 “군민들이 투표해야 임실이 바뀐다”며 “이번 경선은 임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인 만큼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과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오만호 기자



“국민 알 권리 보장... 정책 토론회 열자”

김갑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경선 확정·공식 출마

“혁신당이 주도하는 선도적 정책 선거 모델 만들 것”

조국혁신당 김갑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확정과 함께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정책 중심 선거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갑수 예비후보는 8일 오전 전경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선 흥행을 이끌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경선이 단순 경쟁을 넘어 장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선도적 정책 선거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장수군수 경선은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지방선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장수군수 경선이 확정된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장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새로운 장수! 김갑수는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65세 이상 어르신 미장원·이발소·목욕탕 무료 이용 △태양광 수익 등을 활용한 ‘장수형 햇빛 연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최대 4년) △군수실 개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수보건의료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문화체육스포츠센터 체계화 △시설프리공간 설립



△장제련 스포츠센터 건립 △한우 산업 육성 및 유통센터 설치 △7개 읍·면 균형발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청년·청소년 정책 확대, 전통신장 활성화, 반려동물 복지 강화, 주민 참여형 수익제도 도입, 시 기반 행정 및 홍보 강화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부정부패 없는 후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후보가 선택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적 선진국 모델을 장수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갑수 예비후보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번 경선이 조국혁신당 최초의 기초단체장 경선 사례이며,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함께 경쟁을 펼치게 된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노동 가치 존중, 차별 없는 진안”

진안군청 공무원노조, 전춘성 군수 예비후보 지지 선언

진안군청 공무원노동조합(조합장 유승조, 조합원 204명)은 8일,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공무직노조는 8일 낮 12시, 전춘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선언식을 갖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헌신해온 전춘성 후보가 민선 9기 진안군정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은 지난 민선 8기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전 후보에 대한 공무직 직원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노조 측은 지지 배경에 대해 “전춘성 후보는 지난 2024년 단체협약 당시, 공무직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며 “공무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별 없는 일터, 노동자가 존



중받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군정이 필요하다”며 “민선 8기의 성과를 민선 9기로 이어가 진안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삶을 돌볼 전춘성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춘성 예비후보는 “다시 한번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공무직 노조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활기찬 진안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드시 군수에 당선되어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 하겠으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더 큰 진안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민주 청년모임,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의원에 사죄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청년정치인 모임이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8일 임지용 운영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청년정치인의 미래를 술값과 땀만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의혹은 민주당이 지향해온 정치적 가치와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지역 정치에서 고착화된 수직적 권력 구조 속에서 청년 정치인의 자율성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역위원장과 청년 정치인의 관계가 본래 수평적 협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갑과 을’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여성 정치인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정치인의 존엄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며 “청년을 기득권 정치의 소모품처럼 활용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모임이 정책 간담회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명확한 비용 지불 방식과 지역과 무관한 주최자, 법인카드 결제 과정 등 여러 정황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신속하게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기득권 정치 세력이 정치적 부담을 청년에게 전가한 사례”로 규정하며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의지를 꺾고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만호 기자